

근대적 공론장의 등장과 정치권력의 변화: 《독립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장 명 학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조선왕조의 국운이 위기에 처해 있던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다수의 백성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영역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 주력했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의 태동을 의미했다. 전통적인 군주제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효용성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간파한 《독립신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백성내지 국민의 민주적인 잠재력에서 찾았다. 이로써 《독립신문》은 백성 또는 국민이 구할만한 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독립신문》이 제기한 산적한 현안들을 지식인 및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론화시켜 나갔던 근대적인 정치사회단체가 〈독립협회〉이다. 특히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문자를 매개로 한 공론형성에 주력했던 《독립신문》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수의 시민 참여에 의한 공개적인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혁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배양된 민주적 잠재력은 1898년 한 해 내내 지속된 '만민공동회'에서 근대적인 민주적 공론 정치와 국민내지 인민의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근대적 공론장, 공론정치, 백성, 국민, 민주적 잠재력, 정치권력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37-B00002).

I. 서론

조선 왕조 5백년의 정치사는 군주와 사대부관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 방안 또한 전통적인 공론형성의 주체였던 왕과 사대부들 사이의 상소와 비답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여기서 상소와 비답 등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은 군주제하의 전통적인 공론장의 특성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공론형성의 주체 또한 당시의 지배계급이었던 왕과 사대부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반면에 조선 왕조의 국운이 위기에 처해 있던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다수의 백성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정치영역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 주력했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의 태동을 의미했다.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이후 1899년 12월 4일 폐간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줄곧 구한말 한국사회의 근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담론의 장이자 공론형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이처럼 개화기 한국사회에서 근대적인 공론장을 태동 및 발전시킨 《독립신문》이 목표로 삼았던 최우선 과제는 낡은 관습에 젖어있던 구한말의 조선 백성들을 계몽하고,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당시의 한국사회가 처해있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독립신문》은 한편으로는 자주독립, 자립자강, 자유민권 사상을 공론화시켜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지배질서를 개혁하여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했다. 대내적으로는 전제군주제하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양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신분제 철폐 및 차별 타파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권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향했다.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대항하고 외세의존을 극복함으로써 독립국가의 자주성을 지켜내고자 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의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국가운영 및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변화를 필요로 했고, 이는 특히 조선왕조 내내 정치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다수 백성들을 정치의 주체, 즉 근대국가의 '국민'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발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나 통치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인 정치참여와 '공론'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공론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

켰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의 발행 이후 우후죽순처럼 발간되기 시작한 여러 다른 신문들¹⁾을 보더라도, 《독립신문》이 다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근대적 공론장의 급속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명백하다. 아울러 근대적 공론장의 발전은 이제 전통적인 군주체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효용성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독립신문》은 백성 내지 국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잠재력의 발현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공론장의 발전에 내재하는 이러한 정치적 함의는 당시의 핵심적인 공론매체인 《독립신문》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론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백성 또는 국민이 구한말 한국정치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다시 말해서 《독립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근대적인 정치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히 1890년대 말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된 여러 정치활동들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독립협회〉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집된 ‘만민공동회’는 국민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적 힘으로서, 전통적인 지배질서를 고수하던 수구 정치세력들과 대결했다. 특히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에 의해 공론화된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통한 근대국가의 수립을 지향했던 정치운동이었다. 한국 최초의 정치사회단체인 〈독립협회〉가 지식인들의 조직화와 함께 논쟁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개혁의 공론화를 추구했다면, 만민공동회는 누적된 국내외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의 시민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해 정치적 의지를 분출해냈던 근대적인 정치의 공간, 즉 공론 정치의 체험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만민공동회는 전통적인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다수 백성들의 정치적인 힘, 즉 국민의 권력이 출현한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민공동회의 정치활동은 당시 조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던,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 또는 인민의 정치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요컨

1) 예컨대 1898년 4월에는 한국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이 발행되었고, 그해 8월과 9월에는 구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인 한글전용의 《제국신문》과 국한문 혼용의 《황성신문》이 창간되어 국권을 박탈당한 1910년까지 발행되었다. 그리고 1899년에는 《시사총보》와 《상무총보》 등이 잇따라 발간되었다.

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집회는 《독립신문》에 의해 배양되고 성장하기 시작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에 토대를 둔 공론정치이자, 다수 국민들에 의한 '새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권력의 탄생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최초의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독립신문》은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²⁾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독립신문》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에 내재하고 있는 민주적 잠재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내고, 동시에 이를 전통적인 지배권력에 대립되는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와 권력개념과의 연관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구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인 아렌트(H. Arendt)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공론장이론의 핵심을 검토하고(제2장),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이 추구했던 백성계몽과 국정개혁안들에 내재한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제3장).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주도하며 이를 공론화시켜 나갔던 <독립협회>, 그리고 열강의 이권침탈에 대항하고 근대적인 국정개혁을 추구했던 '만민공동회'를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인민 또는 국민의 정치권력의 출현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제4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특성을 종합, 정리하면서 서구의 그것에 비추어 평가할 것이다.³⁾

2) 이태진(2000)과 주진오(1995) 등과 같이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추구했던 근대적인 개혁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러한 개혁운동이 왕권약화를 초래했고, 제국주의의 위협성을 간과했으며 나아가 반민중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근대정치의 이면에 놓여있는 민주적 잠재력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3)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신문》의 사설은 LG 상남재단의 영인본에 의거하고 있으며, 문체는 현대식으로 고쳐서 인용하였다고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한문을 삽입하였다. 아울러 사설의 인용출처는 발행된 연월일로 한정했다.

II. 공론장이론과 정치권력

공론장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와 그 이론화 작업은 서구 정치이론에서도 비교적 근래에 와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공론장과 권력의 연관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서구에서 공론장이론을 체계화한 두 사람의 논의를 정치권력과 연관시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렌트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공론장은 언어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의 중요한 현안들이 구체화되는 공론의 영역이다(Arendt 1993, 9). 이때 아렌트가 말하는 공론장, 즉 공론영역은 개체유지와 종족보존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필연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정경제의 영역이자 사적(私的) 영역과는 엄격히 구별되며, 또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사적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인 필연성 때문에 가정경제 영역의 특성은 강제와 폭력이 허용되는 불평등의 공간이다. 반면에 도시국가의 공적인 삶과 연관된 공론영역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의 세계로서,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를 지닌 서로 다른 인간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의사소통하는 공론장으로서, 아렌트는 이를 정치의 영역으로 규정한다(Arendt 1958, 31-36).

뿐만 아니라 아렌트의 권력관 또한 공론장에 기초한 정치영역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아렌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권력관은 '지배' 내지 폭력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동시에 정치공동체인 국가 또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력, 즉 폭력수단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나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지배와 권력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권력에 대한 베버(M. Weber)의 견해,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Weber 1972, 28)라는 수단내지 도구적인 권력개념으로 수렴된다.

반면에 아렌트가 말하는 권력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형성되는 공론에 기초한 힘, 즉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렌트는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치를 '이소노미'(Isonomie), 즉 시민들 공동의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치로 규정한다. 법의 지배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권력에 연계시키고 있는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도구적인 특성과 함께 폭력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배버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국가의 각종 정치제도들 또한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정당성'을 이미 내재한 공동의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렌트에 의하면 국가의 정치제도들은 인민들이 함께 하는 역동적인 힘, 즉 '권력의 발현'(Manifestation)이며 이러한 권력의 '구체적인 형태화'에 지나지 않는다(Arendt 1970, 42). 국가의 붕괴란 인민의 권력이 떠났음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아렌트의 권력개념은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의 장인 공론장에서 형성되며, 모든 정치공동체 존립의 정당성을 근거짓는 토대이기도 하다.

아렌트의 공론장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하버마스가 아렌트의 권력개념을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지칭한 것도 언어를 통한 대화와 공론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Habermas 1992, 182). 하지만 아렌트의 도시국가 공론장이 근대사회에 와서는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는 하버마스는, 근대 시민계급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공론장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근대사회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철저하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범은 근대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 그 대신 새로운 통합기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근대시민들에 의한 '부르주아 공론장'이다(Habermas 1990, 21-32). 부르주아 공론장은 18~19세기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신문, 잡지 등 문자매체를 통해 결집된, 기본적으로는 사적 개인인 근대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에 의거한 공론형성의 장이었다. 사회적 현안들은 이제 전통적인 권위가 아닌, 부르주아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의에 의해 공론화되었고, 이를 통해 전제군주의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길러나갔다. 근대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의 정치적인 힘 내지 권력이 전제군주를 몰아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초기에는 근대시민의 이익을 대변했던 부르주아 공론장이 이제는 전체 인민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일반의지'(general will)를 표방하기에 이르렀고, 또 이를 바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성공했다(장명학 2003, 17).

그러나 부르주아 공론장은 20세기 후반,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경제의 확대와 '권력'을 매개로 한 국가행정의 지속적인 확장에 의해 공론장의 정치적 역할이 점

차 축소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를 경제 및 행정이라는 양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세계 내에 잠재된 민주적 역량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체계와 권력이 효과적으로 운용 및 행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나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당화'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권력 행사의 정치적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에서 나오며, 이는 최종적으로는 생활세계에 위치한 자율적인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인 민주적 공론장에서 비로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닌 권력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화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의 영향력이 유권자나 의회에서의 공식적 의결과 같은 제도적인 절차의 매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92, 450).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인 '법'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기원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국가의 행정 권력으로 양분된 권력이 제정된 법을 통해 매개됨으로써 충족된다. 이때 의사소통적 권력은 행정 권력에 우선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물론 정치체계의 정당성도 여기에 기인한다(Habermas 1992, 198; 364).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이들은 공히 대화와 토론이라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공론장과 정치권력의 연관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아렌트의 경우 고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론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밀한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하버마스는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변화된 조건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공론장과 권력개념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자의 공통점은 공론장 개념에 내재하는 '민주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 공론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 잠재력을 발산하는 공론장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의 형성공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공동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건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론장과 정치권력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이론은 구한말에 태동한 한국의 공론장과 권력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서구 고대의 자유시민들의 공론장이나 특히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등장한 근대적 공론장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발전 단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구한말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인 공론형성과 공론 정치에 의해 발현되는 인민내지 국민의 정치권력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핵심 논점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발전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대적인 정치와 권력의 모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이제 《독립신문》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III. 《독립신문》: 한국최초의 근대적 공론장

열강의 이권침탈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 국운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던 1896년 2월 11일, 극비리에 단행된 고종의 아관파천은 당시의 조선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때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⁴⁾이 귀국했다. 서재필에 의해 1896년 4월 7일 창간된 한글전용의 《독립신문》은 당시의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근대적인 개혁,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법 등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를 추진케 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열강 및 일본의 이권침탈에 직면한 조선을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탈바꿈시켜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지향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2년 후부터 《매일신문》을 비롯하여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각종 새로운 신문들 또한 등장했다. 이를 보더라도 《독립신문》이 구한말 당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선구적

4) 1894년 3월 김옥균의 암살과 갑오경장(1894~1896)으로 인해 조선정부에서는 갑신정변 주역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이때 복권된 사람들 가운데는 서재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1976, 6)를 참조. 당시 황현같은 사람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서재필을 비판했다. 오늘날에도 그는 같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황현(1973, 268)과 려중동(1992, 76)을 참조.

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분명하다(신용하 1976, 21-23).

《독립신문》 첫 호의 발행부수는 300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98년 1월에는 약 1500부, 그해 7월에는 3000부로까지 늘어났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에 달하는 독자대중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시장이나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돌려 읽었을 정도로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98년 11월 9일자 《독립신문》 사설란은 양구군에 사는 군민 김리선, 김기서, 조성룡 등 3인이 《독립신문》에 보낸 기고를 실어, 양구군수까지 나서서 신문 돌려읽기를 권장했던 당시의 생생한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요사이 본 군수가 한 장시를 설립하고 친히 장에 와서 상고[商賈: 상인]와 인민이 많이 모인 후에 당세 형편을 일통 연설하고, 국문과 한문 번역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크게 질러 독립신문을 읽히니, 오는 사람과 가는 손이며 장사하는 사람과 촌백성들이 어깨를 비비고 둘러서서 재미를 붙여 함께 듣고 모두 찬탄하는지라. 이 다음부터는 물건 매매하는 장시 인민뿐 아니라 독립신문 들으러 오는 백성들이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다투어 모여들어 …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여, 본시(本市)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의문하고 앙포하오니, 독립신문을 본군(本郡)에 보낼 때에 일체로 한 장을 더 붙여 보내시면 신문 값은 또한 본군 군수에게로 붙여 보내오리니, 조량하심을 업드려 바라노라고 하였더라(1898. 11. 9).

이처럼 《독립신문》은 여러 사람이 돌려 읽거나, 또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신 읽어줌으로서 발행부수를 훨씬 증가하는 수많은 대중 독자층을 확보했고(신용하 2001, 361-362), 특히 이 신문의 사설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형성의 장, 즉 공론장의 역할을 독특히 담당했다. 여기서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이 차지했던 의미는 다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근대적인 대중 전달매체인 《독립신문》은 순 한글전용을 고수했는데,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전용을 채택한 《독립신문》의 독자는 당시의 조선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대상이었다. 반면에 조선왕조 시대를 지배했던 문자는 한문이었고, 이에 근거한 말과 글의 유리현상 때문에 백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불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볼 때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문만이 유일무이한 참된 글이라

고 숭상되었고 한글은 언문으로 폄하되었던 구한말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글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글창제 이후 처음으로 조선인민의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이와 함께 《독립신문》은 한글을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공동 언어이자 국가적인 언어, 즉 국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부여했다(신용하 1976, 17-19). 즉 한글전용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군주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 모두에게 정치·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독립신문》이 한글전용을 고수한데는 주필이었던 서재필의 노력 외에도, 이 신문의 조필 및 기술제작을 도맡았던 국어학자 주시경(필명: 주상호)의 선구자적인 노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임을 강조하곤 했던 주시경은 한문공부에 드는 막대한 시간을 발전된 서구의 현대과학을 익히는데 사용함으로써 조선의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897. 4. 22; 1897. 4. 24; 1897. 9. 25; 1897. 9. 28). 뿐만 아니라 한글전용에 따른 어문일치는 우리 민족이 비로소 민족적 정체성과 자아(自我)를 획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문자의 신속한 이해를 위해 띄어쓰기를 단행했던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한문이라는 독점적인 문자해독능력을 지녔던 사대부 지배계층의 지위 또한 일거에 붕괴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한글전용은 당시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을 신문이라는 대중전달매체의 특성을 살려 '공개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대부 신분제를 대변했던 한문 대신 모든 백성들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한글의 본격적인 사용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객체에 불과했던 모든 백성들을 국가의 주체인 근대적 '인민' 또는 '국민'이라는 하나의 범주 속에 통합시키는 보다 깊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요컨대 한글의 '국어' 화와 백성을 대체한 주체적인 국민개념의 형성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독립신문》 창간호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 우

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띠어 쓴 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1896. 4. 7).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의 여러 사설에서는 백성이란 용어 외에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정치공동체의 주체를 의미하는 인민이라는 용어가 《독립신문》 사설 전반에 걸쳐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군주제하의 당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창간 이후 종간 때까지 총 776개의 사설을 싣고 있는 《독립신문》에서 인민과 백성이 사용된 빈도수를 조사해보면, 1896년 336/ 447회, 1897년 429/ 453회, 1898년 542/ 762회 그리고 1899년에는 253/ 814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준필 2004, 41).

이를 보더라도 《독립신문》은 궁극적으로는 인민 또는 국민이 정치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따라서 인민 또는 국민주권 사상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부국강병과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1898. 12. 15)이라고 강조하는 언명이나, 또는 고을의 원이나 각도의 관찰사와 같은 관리들을 ‘백성의 중’ (1896. 4. 16)으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인민의 권리개념은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이미 소개되긴 했으나, 아직 극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을 뿐이며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말이다. 반면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독립신문》은 대중적인 의사소통매체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당시의 백성들을 상대로 공론화시켜 나갔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립신문》이 지향했던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당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직은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스스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신문》 간행의 일차적인 과제란 “인민의 이목을 개명하고자”(1898. 9. 5) 하는 데 있었고, 특히 조선백성들을 근대적인 인민 또는 국민으로 ‘계몽’ 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신문》 사설이 다룬 주된 내용들은, 서구적인 학교 설립과 교육, 미신탈파와 도로 정비, 식목과 복장 간소화 그리고 서양 서적 등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 공업화, 축산업 등과 같이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근대적인 개혁안들이었다.

아울러 《독립신문》은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서 국민주권, 법치주의 등

의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인민들을 계몽시켜 법에 따른 통치, 즉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다만 《독립신문》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존 법에의 복종을 법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법의 특성에 상응하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사실에서는 아쉽게도 근대법의 핵심인 국민내지 인민의 권리에 기초한 입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장명학 2004, 117). 필자가 보기에 이 점은 군주제가 건재했던 당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구한말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대적인 개혁을 역설했던 《독립신문》은 비록 지면을 통한 공론형성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의 전달만을 그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독립신문》의 중요성은 특히 당시의 전반적인 문제상황, 특히 국가의 공적인 현안을 공론화해서 다수의 조선인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수많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기고도 함께 실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면 사실란에 실린 독자기고는 ‘어떤 유지각한 사람’의 이름으로 1896년 11월 19일자에 실린 이후 도합 70건이며 또한 잡보란에 게재된 독자기고는 무려 414건으로서 도합 484건의 독자기고를 신고 있다. 이는 《독립신문》 총 발행 호수 776호 중, 절반 이상을 독자기고로 충당한 것을 의미한다(채백 1994, 35-66). 그만큼 《독립신문》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에만 치중하지 않았고, 당시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인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던 열린 공론장이었다. 열린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공개성에 입각해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독립신문》 또한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공론화에서 정부와 인민의 신뢰가 쌓이고 나아가 국가의 중흥 또한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공사간에 문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서로 의론하여 만사를 작정하고 킁킁한 것과 그늘진 것은 없애버리고 실상과 이치와 도리를 가지고 햇빛 있는데서 말도 하고 일도 하는 것이 나라에 중흥하는 근본일 줄로 우리는 생각하노라(1896. 6. 30).

백성 또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공론은, 좀더 정확히

말하면, ‘공적인 의견’이다. 공적인 의견인 공론은 여론 및 중론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순하고 수동적인 다수의 의견인 중론 또는 여론에 반해, 공론은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공적인 의견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론은 ‘공공성’과 인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능동성’이 함께 내포된 개념이다(김대영 2004, 119-120).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신문》 사설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토론에 의해 형성되는 공론의 중요성을 〈독립협회〉의 창립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나라마다 공론을 가지고 백사를 하는데 대한은 공론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세상공론이 어떠한지 알 수도 없고 또 공론이라 하는 것은 공변되어야 공론이어늘 그저 사랑에나 모여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공론이 아니라. … 처음으로 대한에 독립협회가 생겨 거기서 회원들이 혈심으로 맹세하고 다 위국위민 하자는 목적으로 의론을 하여 인민의 지식을 넓히고 또 공론을 만드니 이런 경축한 일은 대한 사기에든지 한·당 사기에도 없는 일이라(1898. 2. 24).

《독립신문》이 강조하는 공론은, 백성 또는 인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한, 즉 ‘공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론형성 노력은 한국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이 사대하고 있던 중국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상소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론장의 경우, 현실문제에 대한 공론의 활성화보다는, 현실에 대한 유교적인 해석이나 명분론에 치우침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공론(空論)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김홍우 2007, 720).

종합하면, 《독립신문》의 사설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근대화 노력들은 한반도에 쇄도하는 서구열강 및 일본의 이권침탈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한말의 비극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신문》은 조선 인민의 계몽을 통한 부국강병과 자주독립된 국가를 지향했다. 이때 인민내지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데는 국민국가의 토대가 되는 애국심의 고취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예를 들면, 《독립신문》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진작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지어보낸 애국가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각종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일조했다.⁵⁾

그러나 전통적인 지배질서의 영향 아래에 있던 구한말 당시의 여건상, 당시의 조선백성들이 서구에서처럼 근대적인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난한 과제였다. 이 때문에 《독립신문》은 당시의 백성들을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남이 없이, 단지 국가라는 전체 속에 수동적으로 흡수(inclusion) 내지 융합시키는 데 주력한 경향이 없지는 않다(이동수 2006,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산업혁명을 통한 시민계급의 형성이 어려웠던 구한말의 사정은 《독립신문》으로 하여금 우선 시급한 과제의 해결에 몰두하게 했다. 즉 직접적인 국민계몽을 통한 국가적 통합과 자주적인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시급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치중했던 것이다. 공론장으로서의 《독립신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의 정치사회단체인 <독립협회>와 서울 시민들에 의해 소집된 '만민공동회' 등의 정치활동과도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신문》이 계몽을 통해 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근대적인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근대적인 공론정치에 참여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IV. 근대적 정치권력을 탄생시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이 장에서는 군주와 사대부 중심의 전통적인 지배 권력과는 달리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정치권력의 등장을 가시화시켜준 사례들로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문자를 매개로 조선인민의 계몽과 근대국가 형성에 주력했던 공론장인 《독립신문》에 비해, <독립협회>는 회원과 함께 관심있는 대중들을 직접 '모아서' 함께 하는 '토론'을 통해 정치 및 사회적인 현안들인 자주독립과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운동을 '공론화' 시키는 데 주력했다. 구한말의 정치현실을 좌우했던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대중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집되어 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공론정치의 실험 공간이자 국민내지 인민의 정치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5) 독자들이 보내온 애국가를 독립신문에 게재한 것은 1896년에는 5월 9일자부터 도합 11건이며, 그후 1897년과 1898년에 각 한 건이 있다.

1. 〈독립협회〉: 합리적 토론과 논쟁의 공론장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석 달 후인 1896년 7월 2일 창립된 한국 사회 최초의 정치·사회단체였다. 〈독립협회〉는 우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재필을 고문(顧問)으로 하여, 초창기에는 윤치호, 이상재, 이완용 등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자주독립,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운동을 펼쳐나갔다.

협회의 활동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독립문, 독립공원 그리고 독립관 건립사업과 독립문건립 모금운동에 주력하던 시기(창립 초기부터 1897년 8월 28일), ② ‘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조선민중의 계몽운동에 매진하던 시기(1897년 8월 29일부터 1898년 2월 20일), ③ 외세에 저항하며 자주독립과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던 시기(1898년 2월 21일부터 1898년 10월 27일), ④ 정부의 대신들을 합석시켜 자주민권자강을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을 추구했던 ‘관민공동회’가 소집된 시기(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 ⑤ 만민공동회와 함께 외세를 업은 수구파 정부의 본격적인 탄압에 대항했던 시기(1898년 11월 3일부터 1898년 12월 25일) 등이 그것이다.

〈독립협회〉는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제반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에 매진했던 근대적인 공론장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특히 〈독립협회〉가 취했던 일련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토론회’의 개최에 있다. 원래 토론을 위한 모임은 1896년 11월 30일 배재학당에서 조직된 〈협성회〉가 그 시초였다.⁶⁾ 〈협성회〉에서 토론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자 서재필은 1897년 8월 29일부터 〈독립협회〉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상회’(通常會)라고 불렀다(신용하 1976, 33). 원래 독립문과 독립공원 건설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출발했던 〈독립협회〉는 통상회라는 모임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정세의 전개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현안들을 공론화시

6) 1897년 7월 8일 개최된 〈협성회〉 토론회는 배재학당 종강식을 맞아 서울 주재 각국 외교관을 비롯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리고 배재학당 수학 당시 협성회의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청년지도자 이승만은 서재필의 강의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 자유의 사상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식(2003, 219-220)을 참조.

키고 이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독립신문》은 1898년 11월 29일자 '잡보'란의 공고에서 토론회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돌아오는 토요일 통상회에 토론할 문제를 내서 회중에 반포하는데, 문제는 '신(信)과 의(義)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본국을 다스리는 데와 외국들을 사귀는 데 제일 요긴함'으로 결정하고, 우의(右義)는 이승만·장태환, 좌의(左義)는 이상재·방한덕 사(四)씨로 선정하였다는지라. 돌아오는 반공일 통상회 토론에 긴요하고 재미스러운 말이 많이 있을 터이니 독립협회 회원들은 연고 있다 청탁들 말고 관민간에 모두 가서 참여들 하키며, 방청하실 첨군자들도 많이 가서 들으시오 (1898. 11. 29. 잡보).

이 기록에 따르면 통상회는 중요한 현안을 의제로 설정한 후, 좌우 양편으로 토론자들을 나누어 공개적인 토론 및 논쟁을 벌이게 했다. 즉 이승만과 장태환이 한 팀을 이루고, 이상재와 방한덕이 다른 한 팀을 이루어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토론을 전개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찬반 표결을 통해 가부(可否)를 결정했다. 여기서 벌어진 치열한 토론의 과제들은 물론 당시 조선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를테면 교육문제, 외교문제, 위생 및 통상문제, 의회설립문제 등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들이었다.

여기서 '토론'이라는 용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당사자들 사이의 평등한 발언권이 동등한 권리로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이 아닌, 평등한 지위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였다. 둘째, 이러한 토론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보다 나은 논거를 제시하는 자가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동의내지 지지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공적 현안에 관한 민주적인 토론의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독립협회>의 토론회 상설화는 군주에 대한 신하 및 백성에 의한 상소와 비답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근대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물론 토론회가 거듭할수록 의사소통 과정의 절차와 수준 또한 날로 발전했다(McKenzie 1969, 68). 공론 활성화를 위한 통상회의 노력은 《독립신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조선왕조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근대적인 공론형성의 장, 즉 공론장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이의 확산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통상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된 공론들은 회원들 및 일반인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대중매체에 게재되어 전국 각지의 인민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나아가 다수가 지지 내지 동의하는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낳았을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에서 논의되었던 현안들은 즉시 정부에 상소와 의견서 그리고 질의서를 보내졌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직책이 바로 ‘총대위원’(總代委員)이라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직책은 토론회에서 회원들이 의결한 사안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정치적 토론 및 집회를 주도하는 총대위원은 상설직이 아닌, 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직접민주적인 조직운영 방식이 채택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독립협회>의 이러한 민주적 운영방식은 민권의식이 뚜렷한 수많은 젊은 이들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8년 말 <독립협회>의 회원수는 약 4,200여 명에 도달했고, 만민공동회와 함께 <독립협회>가 해산됐던 1898년 12월 25일에는 구속된 회원만도 4백여 명에 달했다(신용하 1976, 96). 협회 회원들 중에는 나중에 좌우익을 막론하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이 배출되었을 정도이다.⁷⁾ 이는 당시의 <독립협회>가 한국의 근대적인 민주적 정치사회단체로서 지녔던 위상을 짐작케 해준다.

종합하면, 토론회를 통한 공론형성을 추구했던 <독립협회>의 활동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시 조선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갑신정변’과 같은 쿠데타나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민중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 인민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형성에 의거한 민주적인 개혁을 지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수 인민에 의한 공론형성을 통해 당시의 조선이 처해 있던 제반 문제들을 함께 해결코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추구했던 <독립협회>이었기에 다수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으며, 이는 후에 대규모적인 평화적 정치집회인 만민공동회라는 근대적인 공론정치의 공간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권력이 출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7) 예를 들면,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이동영, 이동휘, 노백린, 나철, 남궁억, 김규식, 신채호, 장지연, 박은식, 지석영, 주시경 등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독립협회의 회원이었다(신용하 1976, 511-512).

2. 만민공동회의 공론정치와 근대적 정치권력의 출현

한국사회 최초의 대중적인 정치집회의 형식을 띤 만민공동회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활성화된 공론장이 구한말의 현실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근대적인 공론정치와, 다수 인민의 결집된 힘인 새로운 정치권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대 사건이었다.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10일부터 그해 12월 25일까지 정치사회적인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의 종로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소집되어 당시의 국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3월 10일에 개최된 최초의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주도하에 약 1만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종로 백목전(白木廬) 다락 앞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 조차 문제와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그리고 한러은행의 철수를 기치로 내걸고 이승만, 문경호, 현공렴 등이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규탄했다(1898. 3. 10). 이들 후인 3월 12일, 서울 남촌에 사는 백성들이 〈독립협회〉의 지도 없이도 자발적으로 대규모적인 시위를 통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요구는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절영도 대신 청국의 요동반도로 해군기지를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통고했고, 한·러은행 또한 폐쇄됐다. 만민공동회의 결집된 정치적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을 당시 조선에 주재하던 각국 외교관들 또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의 만민공동회는 1898년 9월 11일, '김홍륙 독차사건'⁸⁾을 계기로 소집되었다. 즉 김홍륙의 모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범인만 처벌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고수했던 〈독립협회〉 세력과, 구습인 연좌제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민영기, 윤용선, 길영수 등 수구파 정부 세력의 갈등은 만민공동회의 소집으로 발전했다. 중추원 앞에서 시작된 만민공동회는 시전 상인들이 합류함으로써 대규모

8) 아관파천 당시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러시아어 역관 김홍륙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배를 가게 되자 궁중의 주방장을 꺾어 고종이 즐겨마시던 커피에 독약을 타게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

적인 군중집회로 발전했다. 만민공동회의 결집된 힘에 놀란 고종은 10월 12일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양을 정부수반으로 하는 개혁과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세 번째는 개혁과 정부의 수립과 함께 관(官)과 민(民)이 함께하는 ‘관민공동회’의 개최였다. 여기서는 연초부터 〈독립협회〉 토론회와 《독립신문》에서 제기되었던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 《독립신문》은 그해 4월 30일자 사설에서 행정과 의회의 분리를 위해서는 의회설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세계의 개화 각국이 정부를 조직하였는데, 각색 일을 생각하여 의사와 경영과 방책을 생각하여 내는 관원들이 있고, 그 생각을 시행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관원들이 있는지라. 생각하고 방책내는 마을을 외국서는 말하되 의회원이라 하며, 의회원에서 작성한 방책과 의사를 시행하는 마을을 내각이라 하는 것이라. … 일국 사무를 행정관이 의정관의 직무를 하며 의정관이 행정관의 직무를 하라고 하여서는 의정도 아니되고 행정도 아니될 터인지라(1898. 4. 30).

이처럼 개혁과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의회 설립문제는 이제 공론장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의회 설립문제는 격동하던 구한말의 정치적 상황이 새로운 전환점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 전통적인 전제군주제의 정치적인 형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명백히 근대적인 국민에 의한 정치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확보케 해주는 시도였다. 그만큼 의회설립은 왕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대표에 의한 국가적인 현안의 공동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설립이라는 정치개혁이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의회설립이 조만간에 대표자 선출 등과 같은 일반 국민의 참정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웠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나 정부운영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책임 또한 공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는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의 역할을 독특히 해냈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정치개혁 노력이 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의 핵심은 군주중심의 전제정치를 입헌정체로 대체코자 한 정치적 기획에 있다고 강조되기도 한다(최형익 2004, 199).

어쨌든 이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회 설립문제가 우여곡

절 끝에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자, <독립협회>는 관과 민의 대표들이 함께 하는 모임, 즉 '관민공동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의회 설립문제에 관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공개적으로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독립협회>는 정부관리 뿐만 아니라 <황국협회>는 물론 각 학교의 학생, 상인, 승려, 백정 등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에 초대장을 발송했다. 그리고 10월 28일과 29일 양일에 종로에서 개최된 관민공동회에는 <독립협회> 회원들과 황제의 윤허를 받은 박정양 등 정부대신들을 포함, 약 1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와 의정부 참정 박정양 그리고 민(民)을 대표하는 백정출신인 박성춘의 연설과 함께 관민공동회는 개최되었다. 특히 박성춘의 연설은 당시 사회에서 일개 백성이 근대적인 공론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놈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도는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자면 힘이 부족하지만 만일 많은 장대로 힘을 합친다면 그 힘은 매우 튼튼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정교 2004, 248).

박성춘을 비롯해서 관민공동회에는 이름 없는 나무꾼, 콩나물 장수 할머니, 병사, 기생, 신기료장수, 승려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였다. 이는 조선왕조 5백년 이래 처음 있는 대사건으로서, 정치의 객체였던 백성들이 근대국가의 평등한 인민 또는 국민의 반열에 들어서게 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 소집된 관민공동회에서는 정부대신들과 군중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공문을 형성한 후 황제에게 자주 독립국가를 위한 근대적인 정치개혁을 건의하는 이른바 '현의 6조'를 공동으로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현의 6조'를 열람했고, 참석한 정부대신들이 '가(可)'자를 서명한 다음 10월 30일 황제에게 전해졌다(1898. 11. 1).

이 집회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소집된 모든 백성내지 인민들이 정부 관리들과 '공동으로' 국정을 결정하는 근대적인 공론정치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요컨대 한국최초로 국정개혁 과제들을 공론화

시켰고, 또한 관리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정개혁의 방안을 결정했던 것이다. 국정에 관한 이러한 공동의 결정은 《독립신문》에 의해 공론화되고 〈독립협회〉를 통해 활성화된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동시에 이는 공론정치에 의한 새로운 정치권력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관민공동회의 결의는 공론에 의해 형성된 다수 인민의 함께 하는 공동의 의지가 국정에 관철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내지 인민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권력이 탄생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관민공동회에서 결의된 ‘헌의 6조’ 등 개혁정책들은 11월 4일 저녁 수구파 관료들에 의한, 황제폐위와 공화국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익명서(匿名書) 조작사건’ 때문에 아쉽게도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에 고종은 윤치호를 제외한 17명의 독립협회간부 등 총 19명의 체포를 명령했고, 아울러 〈독립협회〉의 혁파를 지시했다(1898. 11. 7).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다시금 경무청 앞에 모여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자발적인 집회를 통해, 〈독립협회〉 간부 석방과 해산된 〈독립협회〉 복설 그리고 회설립을 위해 철야투쟁을 전개했다. 이미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밤이면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 장작불을 지켰고, 구경꾼 또한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만 명이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11월 21일, 〈황국협회〉의 사주를 받은 2천여 명의 보부상이 두 패로 나뉘어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1898. 11. 22). 이때 보부상패의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김덕구는 신발 깎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1898. 11. 29. 잡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만민공동회의 시위는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운집한 수만 명 군중들의 기세와 힘에 놀란 고종은 11월 26일 마침내 〈독립협회〉 복설과 수구파 거두들의 유배를 명함으로써 만민공공회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는 만민공동회에 집결했던 시민 대중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황제의 전제권력을 압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즉 시민 군중들이 함께 했던 만민공동회는 군주의 전제권력에 대항하는 인민의 새로운 정치권력을 현실정치 상황에서 가시화시켜 주었다. 아울러 조선의 백성들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 대한제국의 인민임을 과시했고, 정치의 주체인 ‘국민’으로 거듭났다. 고종은 〈독립협회〉 대표 200인을 불러들였고, 서울주재 외교사절도 함께 초대하여 증인을 서게 한 후, 칙어를 반포했다(1898. 11. 28). 이로써 황제와 만민공동회의 시민 내지 인민대표 사

이에 극적인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이날의 극적인 타협은 '광무계약'으로 지칭되고, 나아가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등장하게 된 대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김홍우 2007, 725-726).

다만 이날 시민대표들과 고종이 합의했던 사항들은 불과 한 달이 채 못되어 또 다시 파기되었다. 그 사이에 고종은 일본공사의 조언을 받아 12월 24일 계엄령을 발동했고,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폭력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듬해인 1899년 8월 17일 고종은 '대한국국제'를 선포하고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무력에 의해 만민공동회가 강제로 진압된 지 채 몇 년이 안되어서 조선의 국권은 일본에 의해 탈취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토오 히로부미가 고종으로부터 국권박탈을 강요하는 장면은 한국 근대정치사의 비극 그 자체였다. 이등박문전(『伊藤博文傳』)에 실린 고종황제와 이토오의 대화 장면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짐인들 어찌 그 이치를 모르겠는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일이 중대하니 지금 그것을 스스로 재가할 수 없다. 짐이 정부신료에게 자문하고 또한 '일반 인민'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토오: 폐하가 정부신료에게 자문하는 것은 지당한 처사이오나 외신(外臣)도 역시 감히 금일에 결재를 소망코자 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는 말씀에 접하여서는 기괴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국은 헌법 정치가 아니라 만기(萬機)가 무릇 폐하의 친재(親裁)로 결정하는 이른 바 군주전제국이 아닙니까. 따라서 인민의향 운운함은 기실은 틀림없이 인민을 선동하여 일본의 제안에 반항을 시도코자 하는 폐하의 심려로 추찰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대한 책임을 폐하 자신이 짊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강재언 2001, 122쪽에서 재인용).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인민의 의지를 짓밟았던 고종은 이처럼 채 몇 년도 못되어 일본의 강압을 물리치고자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인민의 의향'을 들고 나왔다. 이미 때가 늦었다. 이토오는 대한국국제 선포와 함께 공고화된 '전제군주제'의 핵심논리를 지적하며 국왕 자신만의 재가를 강요했다. 우연이었던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시기인 1904년 청년 이승만 또한 『독립정신』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전제 정치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제정치는 첫째 백성의 마음을 압제로 결박하여 시비곡직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게 하매 불평함이 맺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 둘째는 생각을 발달치 못하여 사람마다 남과 같이 흥왕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각각 옷사람의 결박하는 것을 앓아 받으려 하매 타국 사람이 들어가서 나의 이익을 임의로 취한즉 자연히 잔액이 말라 붙이지 못하며 셋째는 백성은 나라 일에 상관없다 하매 백성이 나라를 남의 것으로 알아 보호코자 아니하매 남이 와서 그 위에 있는 몇몇 집권한 이를 혹 뇌물로 꺾이거나 위력으로 꺾박하여 대신 장악해 잡으면 모든 백성을 총 한 방을 아니 놓아도 스스로 팔려들어 올지니 전제국의 위대한 근본이다 (이승만 1993, 109-110).

요컨대 구한말의 정치적 격동기에 정국의 현실을 주도했던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 의해 태동 및 발전했던 근대적 공론장과 인민의 정치의식 발전에 따른 공론정치의 활성화에 의해 국민내지 인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권력 탄생을 엿보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비록 역사에서 가정이란 무의미한 일이지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입헌군주제나 공화제의 채택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국권박탈이라는 비극만은 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V. 결론

독립국가의 자주성 확보와 위기에 처한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근대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던 《독립신문》의 노력은 구한말 한국사회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론장을 태동시켰고, 이를 통해 공론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최초로 한글전용을 채택했던 《독립신문》의 지면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정보의 대중화와 사회적 현안의 공론화 전략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군주의 절대 권력과 사대부 지배계급의 기득권에 도전했다. 창간호부터 국민계몽과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독립신문》의 다양한 전략은 다수 백성들을 공론장과 공론정치의 영역에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그때까지 지배 및 통치의 대상이자 정치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다수 백성들을 민주적인 정치참여와 ‘공론’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근대정치의 영역으로

인도함으로써, 정치의 주체인 근대국가의 국민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독립신문》에 제기된 각종 국정개혁 등 당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론화시켜 나갔던 <독립협회>는 근대적인 정치사회단체의 특성을 심분 발휘했다. 특히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문자를 매개로 한 공론형성에 주력했던 《독립신문》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수의 시민 참여에 의한 공개적인 토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반복되는 토론과정에서 점차 지위의 고하나 신분의 차이가 배제된 평등한 토론당사자로서의 위치 또한 공고화되어갔다. 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상소와 비답에 의한 전통적인 공론화내지 의사소통방식을 일거에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변혁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 토론의 주제들인 당시의 외교와 국방 및 의회설립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들과 함께 교육 및 국민위생 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친 공적인 의제들은 《독립신문》 사설을 통해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논쟁과 토론을 거쳐 다수의 동의를 얻게 된 공론은 공적 의견의 형식을 취하면서 총대위원을 통해 정부에 전달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에서 소수에 의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이나, 정치변혁을 위한 민중봉기였던 동학농민운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근대적 공론정치의 진면목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배양된 민주적 잠재력은 1898년 한 해 내내 지속된 만민공동회에서 근대적인 민주적 공론정치와 국민내지 인민의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정치적 힘내지 영향력은 열강 러시아의 이권침탈을 물리쳤고, 수구파와 대결해서 구시대적인 연좌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법치를 고수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근대적인 의회설립이라는 과제는 다수의 국민들의 참여와 공론화에 성공함으로써 황제의 허락까지 받아낸 관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갔다. 여기서 최하층 계급인 백정에서부터 고위관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여자들이 근대적인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국정개혁 방안을 함께 결정했다. 이로써 정치의 객체였던 조선의 백성들은 이제 명실공히 정치공동체의 평등한 주체, 즉 근대적인 국민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국민내지 인민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권력이 그 모습을

드러났다. 만민공동회에 결집된 국민 대중들의 단결된 정치적 힘은 수구파의 농간에 휘둘린 황제의 전제권력을 압도함으로써, 구한말 한국사회 최초로 다수 국민에 의한 근대적인 민주적 정치권력이 자리매김했다. 만민공동회의 출현은 근대적 공론장인 《독립신문》이 등장한 지 불과 2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해나간 한국인들의 근대적인 정치의식의 발로였고, 동시에 전통적인 지배 권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공론정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차원에서의 권력, 즉 근대적인 국민의 정치권력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권력을 끈질기게 고수했던 고종의 약속 위반과 군대를 동원한 무력진압은 갖 피어나던 민주적인 공론정치의 싹을 짓밟았는데, 이는 국권박탈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권박탈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의 자주 정신과 민주적인 잠재력은 일제하의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한말에 배양되고 발전했던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를 그대로 수용했던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또한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정의 입김보다는 구한말 당시부터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우리 국민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역량에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한말에 등장한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을 서구의 그것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근대의 부르주아 공론장과는 달리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은 근대적 자아 및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시민계급이 부재했다. 아울러 구한말 당시의 한국은 외세의 침탈에 의해 국권이 위기에 처해있었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구 공론장의 발전 배경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 발전이 특수한 경로를 취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근대적 공론장을 대동시킨 《독립신문》의 국민계몽과 자주적 근대국가를 향한 정치개혁의 담론이 당시의 선각자 및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구한말의 공론장은 다수의 자율적인 부르주아 시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 서구의 공론장과는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한말에 태동한 공론장은 군주와 사대부 계급 사이에 상소와 비답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통적 공론장과는 구별되는 근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점에서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과 서구의 그것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공론장의 핵심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현안을 둘러싼 대화와 토론, 즉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영역내지 정치적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한말의 근대적 공론장 또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의 객체였던 백성들이 국민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 배양된 국민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권력의 탄생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공론장의 민주적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참고문헌

- LG 상남언론재단 편. 1996. 『독립신문』.
- 강재언. 2001.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 — 1890년대 후반기의 부르주아적 변혁운동 —.” 서재필기념회 편. 『개화 독립 민주』. 도서출판 삼우.
- 김대영. 2004.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대개전략.” 『한국정치학회보』 38집(여름).
- 김홍우. 2007. “〈독립신문〉과 사회계약.”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인간사랑.
- 려증동. 1992. 『고종시대 독립신문』. 형설출판사.
- 류준필. 2004.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사.
- 신용하. 1976.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 _____. 2001.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서울대출판부.
- 이동수. 2006. “〈독립신문〉과 공론장.” 『정신문화연구』 29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승만. 1993.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 이정식. 2003. 『구한말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서울대출판부.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 장명학. 2003.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집 2호.
- _____. 2004. “〈독립신문〉과 근대적 정치권력의 등장.” 『역사와 사회』 33집. 국제문화학회.
- 정교 저·조광 편. 2004. 『대한계년사 3』. 소명출판.

- 주진오. 1995. “19세기 후반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 백. 1994.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봄).
- 최형익. 2004. “한국에서 근대민주주의의 기원.” 『정신문화연구』 27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황현 저 · 이장희 역. 1973. 『매천야록』. 대양서적.
- Arendt, Hannah. 1958. *Vita Activa*. München,
- _____. 1970. *Macht und Gewalt*. München.
- _____. 1993. *Was ist Politik? Fragmente aus dem Nachlass*. Hg. von Ursula Ludz. München.
- Habermas, Jü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 _____.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M.
- McKenzie, F. A. 1969. *Korea's Fight for Freedom*. Seoul: Yonsei Univ. Press.
- Weber, Max. 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Tübingen.

